

2006. 12

I. 검토배경.....	1
II. 혁신형 중소기업의 현주소.....	3
III. 혁신형 중소기업이 자금조달 저해요인.....	9
IV. 바람직한 금융지원 방향.....	14

I

검토 배경

□ 산업구조가 생산요소에서 지식기반으로 이전됨에 따라 기술혁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등장

- 선진국들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선정하고, 국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정책을 실시¹⁾

□ 90년대 후반들어, 우리나라도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과 판로 등의 지원을 실시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97)』 및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01)』 제정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

- 신규창업과 일반기업 등이 혁신기업으로 전환하여 혁신형기업 수가 증가하고, 세계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탄생

□ 하지만, 대다수 혁신형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의 곤란으로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효과적인 금융지원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상황

- 창업초기(창업후 1~3년)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미흡은 산업생태계의 건강성을 훼손하고, 기술개발에 집중된 자금지원은 개발제품의 사업화 성공률을 낮춰 기업들은 사업화 단계에서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에 직면하는 부작용 발생

1) 독일 : KFW 등의 합리적인 금융시스템을 통해 기술혁신형 기업을 집중 지원
영국 : 대출금에 대한 정부보증, 경영정보 및 수출, 자금조달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링크제도를 운영
미국 :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기술 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 및 지원
일본 : 미국의 기술혁신프로그램을 일본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운영

- **기업체 증가와 정부의 집중지원은 새로운 금융시장 형성을 의미하므로, 당행은 시장선점과 점유확대 전략을 강구해야 할 시점**
 - 경쟁은행들은 기술평가 인력의 확충과 혁신형기업에 특화된 금융상품 개발 등 시장선점을 위해 발빠른 준비를 진행 중
 - 당행의 지행장들은 '경쟁은행과 유사한 대출전략' 및 '일반기업과의 차별성 없는 여신정책'으로 신규고객 확보와 기존고객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

- **당행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자금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

II

혁신형 중소기업의 현주소

1. 혁신형 중소기업 수

혁신형 중소기업은 크게 정부 인증기업과 혁신역량은 갖추었으나 인증 받지 못한 기업으로 구분

□ 정부 인증기업은 당분간 증가할 전망

- 정부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육성하고자 일정요건²⁾을 충족하는 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 혁신형 중소기업은 도전정신이 강한 벤처기업과 탄탄한 기술력을 가진 기술혁신형(INNO-BIZ) 기업을 포함
 - 인증기업(개): '02(10,634) → '03(10,777) → '04(10,729) → '05(13,186) → '06(18,500) → '07(24,000) → '08(30,000)

(:)

	2002	2003	2004	2005	2006.3	2006.6	2006.9
벤처기업(A)	8,778	7,702	7,967	9,732	10,416	11,543	12,198
Inno-Biz(B)	1,856	2,375	2,762	3,454	3,707	4,456	5,373
혁신형 기업(A+B)	10,634	10,077	10,729	13,186	14,123	15,999	17,5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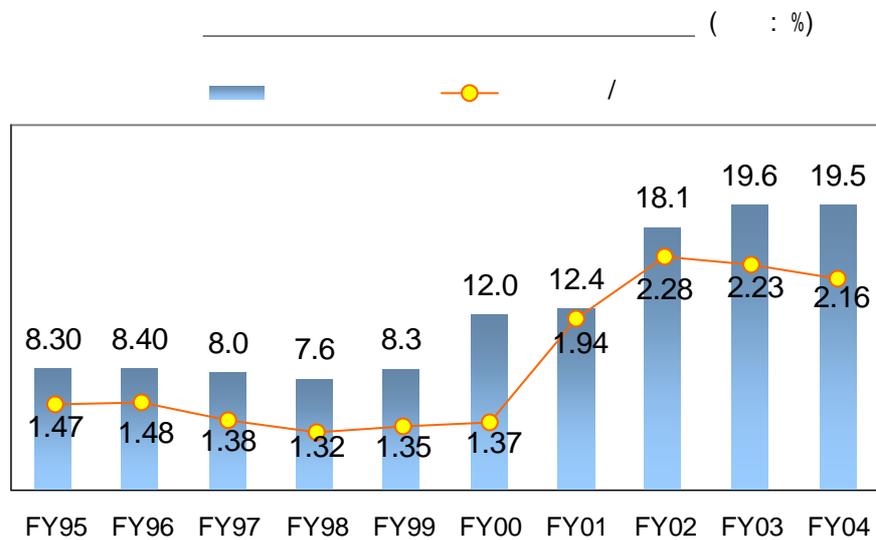
- '06년 9월 현재 인증기업은 약 1만 7천개에 이르고 있고, '08년까지 3만개 기업체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인증기업 수는 당분간 증가할 전망

2) 기술혁신형(INNO-BIZ) 기업의 인증요건은 개별기업의 기술혁신능력(300), 기술사업화 능력(300), 기술혁신 경영능력(200) 및 기술혁신성과(200)에 대한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이고, 개별기술의 평가점수가 B등급 이상(괄호안의 숫자는 항목별 평가비중)

□ 혁신형기업 진입을 준비하는 기업체의 지속적인 증가

○ 기업들의 기술경쟁력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정부의 유인정책은³⁾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참여를 확대

– '00년 이후 중소기업은 혁신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04년에 기술개발 참여기업은 19.5%에 달하고 있고, 개별기업의 투자금액도 매출액의 2.16%를 점유



○ 혁신활동 참여기업의 증가와 기술투자 확대는 혁신형기업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인증을 받지 않은 혁신형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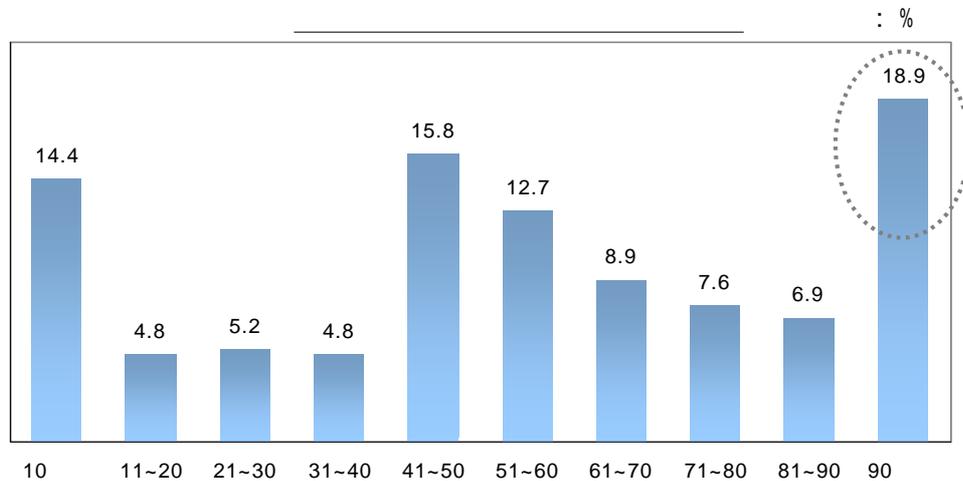
– 특히, 일반기업에서 혁신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잠재 기업이 확대되고 있어 혁신형 중소기업 수는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3) 중소기업청('06.4)은 교수·연구원의 창업활성화, 모태펀드와 KOSBIR제도를 통한 자금지원 확대, 공공구매확대를 통한 사업화 지원, 사업전환 촉진을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발표

2.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영특성

□ 가족중심의 기업경영

- 경영자와 특수관계자 소유지분이 40%를 넘는 기업이 70.8%에 달하고, 90%를 초과하는 기업도 18.9%에 이르고 있어 대부분 기업은 가족형태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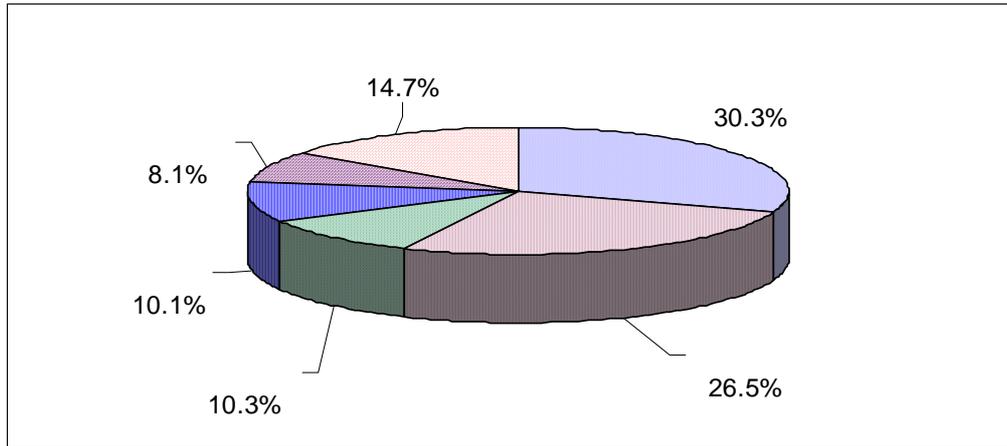


- 다만, 신생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자와 특수관계자의 지분비율이 20%이하인 기업도 19.2%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기업은 가족중심 경영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
- 가족중심의 기업경영은 투자형태 자금조달, 합리적인 구조조정 및 M&A 등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

□ 기술전문가 출신의 경영자

- 기술력이 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 기업의 경영자는 기술전문가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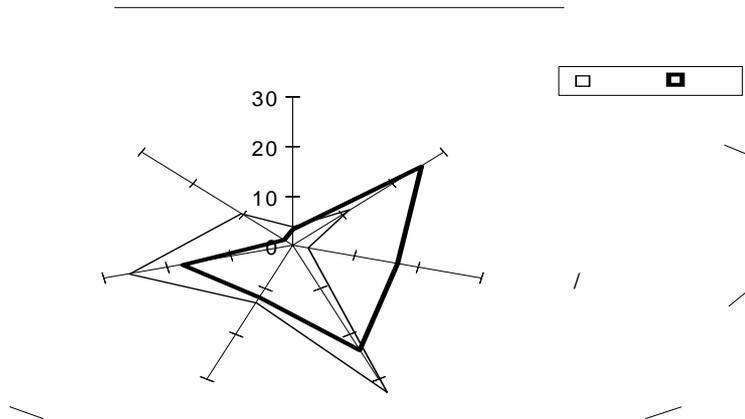
- 56.8%의 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직 출신이 경영자를 담당하고 있고, 연구기관 연구원과 교수가 대부분 기술전문가임을 감안하면 그 비율은 80%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



- 기술직 경영자는 우수한 기술지식을 보유하므로 시장진입까지는 유리할 수 있으나, 자금조달 등 전사적인 경영능력이 부족하여 성장단계 이후에는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존재

□ 경영자 1인에 의존한 아이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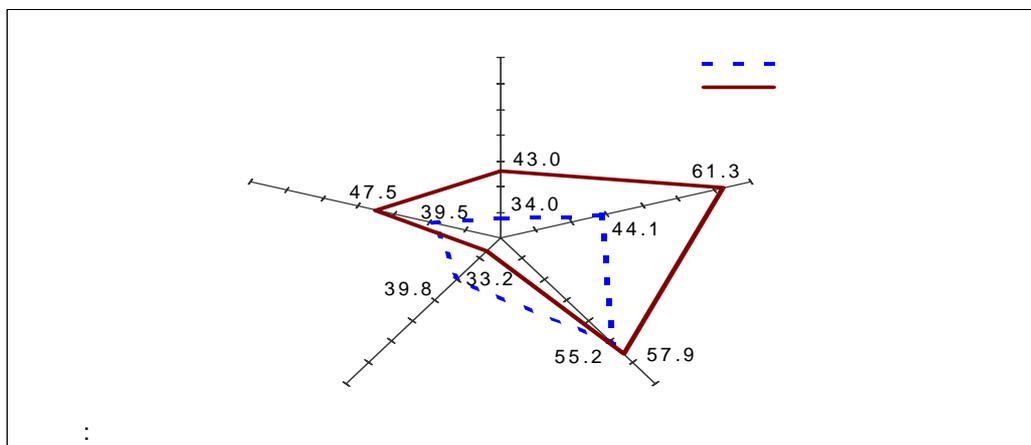
- 기업들의 아이템 개발능력은 세계최고 대비 73.0%로 기술개발(74.6%)과 사업화 능력(75.0%)보다 낮은 수준
 - 그 원인은 기술직 출신의 경영자가 자신의 보유기술을 '세계최고'라고 과대 평가하는 현실에서, 기업들이 경영자에 의존하여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일본기업은 시장추세나 고객의 소비행태를 중시하는 시장지향형으로 아이템을 개발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경영자의 보유기술을 상품화시키는 '밀어내기식' 개발을 추진



- 밀어내기식 개발은 경영자와 자금제공자간 기술에 대한 평가가치의 차이를 발생시켜 자금조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경영자는 개발제품의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기술담보의 자금신청을 하지만, 자금공급자는 평가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금제공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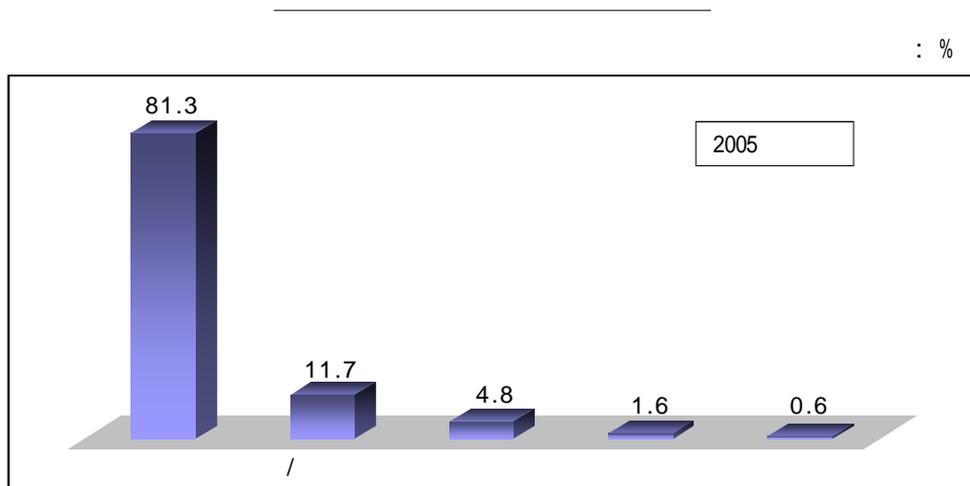
□ 주된 경영애로는 자금조달과 인력확보 문제

- 소기업은 자금조달에서 가장 경영애로를 겪는 반면에, 중기업은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조사



) 5 , 5

- 자금조달 애로정도는 소기업(61.3)이 중기업(44.1)보다 월등하게 높아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큼
 - 중기업의 인력확보 곤란은 기술숙성에 따라 단순직보다 고도기술적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현상
- 자금조달 곤란의 주요 원인은 외부조달자금의 절대적 부족에 기인
- 기업들은 기술개발자금의 81.3%를 자체조달로 충당하고 있으며, 출연·보조금과 융자금 등의 외부조달비율은 18.1%에 불과한 실정



- 이 현상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추구에 따른 외부자금조달의 억제보다는 금융기관 접근이 곤란하여 발생하는 영향이 큼
- 융자금과 출자 등 외부조달비율이 낮은 원인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본질적인 특성에 기인하며, 효과적인 금융시스템 미비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Ⅲ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저해요인

1. 자금공급자 측면

- 기술가치의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부족으로 인해 혁신형기업의 기술기반 자금조달은 초보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
 - 혁신형기업(이하에서 혁신기업)은 대부분 자산이 무형자산으로 구성되고, 기술개발 성공의 불확실성으로 금융기관과의 정보비대칭이 높음
 - 정보비대칭은 역선택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위험을 발생시키게 되어 금융기관은 자금공급에 소극적 자세를 유지
 - 기술력은 혁신기업의 지속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은 정보비대칭을 완화
 - 정부는 기술평가표준모델(STBR)을 개발하여 금융기관에 보급하고 있지만, 대출확대로 연결되기는 어려운 상황
 - 평가모델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은행들은 평가지표를 대출심사에서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수준
 - 정부는 평가기관의 평가능력 제고에 정책지원을 집중하고, 금융기관은 효율적인 자금공급을 위한 자체 평가모델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
- 정책자금과 민간금융의 지원영역 중복은 우량기업에 자금공급을 집중시켜 기술력이 우수한 신용도 취약기업은 자금난 지속

- 정책자금은 민간금융의 접근이 곤란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문에 대해 보정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효과적 작동에 기여할 의무를 지님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대표적 시장실패 영역인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이 19.1%이고, 모태펀드의 초기기업전용 투자펀드 출자비율은 17.4% 수준

가

가

- 이는 정책금융기관이 보증 또는 출자자산의 손실을 줄이고자 부실위험이 낮은 우량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데 기인
 - 보증기관 취급자가 손쉽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수의 우량기업에 거액의 보증을 이행하려는 경향도 한 요인으로 작용
-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이 시장실패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수립이 긴급

□ 자금지원의 연계성 부족은 혁신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데 한계요인으로 작용

- 정부는 혁신기업의 금융니즈에 맞는 자금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맞춤형 정책(Tailor-made Policy)을 추진
- 혁신기업은 아이디어개발, 기술개발, 시제품생산 및 마케팅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 상당수 기업체는 사업화(마케팅) 단계에서 경영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자금지원은 기술개발에 집중되어 성장단계의 선순환 구조가 파괴
 - 68.3% 기업체가 기술개발자금을 받았으나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연계하여 받은 기업은 17.3%에 불과한 상황

- 정부는 개별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자금을 연계하여 공급함으로써 기업들의 자생력을 높여주어야 함

□ 민간금융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로서의 정책자금 역할이 미흡

- 정책자금은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에게 자금이 공급되는 장점이 있지만, 희소자원의 효과적 사용과 금융기관의 시장참여를 억제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킴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평가능력이 우수하고 기금법상 기본재산의 20배('05년; 14.3배)까지 보증운용이 가능하므로 대출재원을 보증기관에 출연함으로써 희소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레버리지 효과에 따른 지원기반 확대가 가능
 - 보증기관의 보증확대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시장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민간금융을 이용한 자금공급이 가능
- 희소자원의 효과적인 사용과 금융기관의 시장참여 확대를 통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을 보증기관 출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전환이 필요

2. 자금수요자 측면

□ 기술개발형 중소기업의 신용도 미흡

- 기술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투자자금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개발기간 중에는 매출도 실현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어서 많은 혁신형 중소기업은 신용도가 미흡한 상황
 - 신용도 미흡은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은행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투자자의 기대수익에 상응하는 수익창출 능력 부족

- 고위험-고수익의 경영특성을 가진 혁신기업이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수익창출능력 확보가 필수
 - 투자자는 투자대상기업을 회수시장(M&A, 기업공개)에 진입시키거나 배당금을 통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들은 기업의 수익창출 능력에 의해 좌우
- 혁신기업은 적절한 마진율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장 확대를 통해서 수익창출이 가능하지만 이를 충족하는 기업체는 소수에 불과
 - 주요원인은 60%이상 기업체의 매출처인 대기업 납품에서 적절한 판매가격 수취가 곤란하고, 세계수준의 경쟁력 확보능력이 부족한데 기인
- 혁신기업은 세계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대기업과의 불공정거래 개선과 시장 확대가 가능한 만큼, 세계시장을 겨냥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이 필요

□ 창업자의 경영권에 대한 강한 애착심은 지분분산이 수반되는 투자자금 조달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대부분 혁신기업은 창업자가 경영자를 영위하고 소유지분이 가족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영권 보호에 강한 의지를 가짐
- 경영권 보호의지는 투자형태의 자금조달을 억제하고 사업 구조조정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투자자금조달은 지분분산을 유발시킴에 따라 경영자는 경영권 보호를 목적으로 자금조달을 기피

- M&A는 투자자의 중요한 자금회수 경로이지만 경영자의 거부감으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자금공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경영자는 투자형태의 자금조달이 기업성장에 필요하다면 지분축소에 대한 우려보다 자금조달을 받아들이는 의식전환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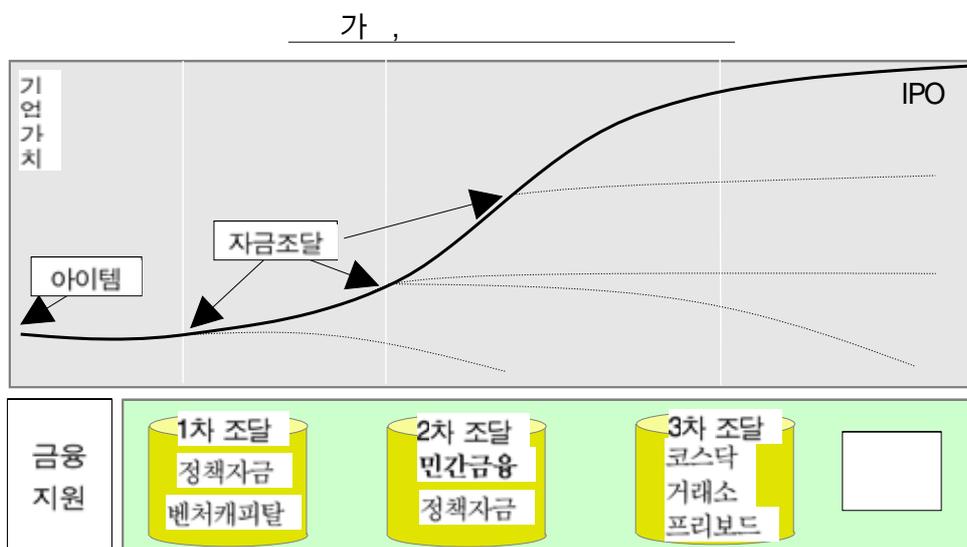
IV

바람직한 금융지원 방향

1. 기업성장과 자금조달 관계

□ 자금은 기업가치를 한 단계 상승시키는 혈액과 같은 존재

- 일반적으로 혁신기업은 창업부터 성공단계(IPO)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 자금조달이 필요
 - 혁신기업이 IPO단계에 진입하면 제품혁신보다 공정혁신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게 되어 혁신기업 속성이 희석되므로 성공으로 간주



□ 원활한 자금조달은 기업의 대출요건 충족을 위한 노력과 금융기관의 효과적인 금융시스템이 구축될 때 가능

- 1차 자금조달은 기업이 성공단계로 가는 첫 관문으로, 성공기업은 기업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나 실패기업은 시장진입도 못하고 사라짐

- 자금제공자는 기술이 아닌 개발제품의 시장성을 판단하여 금융지원을 실시함으로 기업들은 판매가능성이 높은 아이템 개발이 중요한 과제
- 사업화의 높은 불확실성과 장기의 투자자금 회수기간을 고려할 때, 자금 공급은 융자보다 투자형태가 효과적인 방법
- 산업생태계의 건강성을 결정하는 단계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부문이지만, 높은 회수위험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부문(정책자금, 벤처캐피탈)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단계
- 추가(2·3차) 자금조달은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거나 성숙단계에 진입하는 단계로써 자금조달 실패기업은 중소기업에 머물거나 시장에서 퇴출
 - 1차 자금조달 성공기업은 숙성과정을 거쳐 기업규모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므로 핵심인력 보유가 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단계
 - 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의 실현을 위해서는 핵심인력 특히, 마케팅과 영업인력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임
 - 기업들은 신용위험이 상당부분 축소되는 만큼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상업은행과 직접시장의 역할이 중요

□ 향후,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민간금융이 주도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수립이 필요

- 정부정책과 주식·회사채 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시장규모와 가용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기업들의 모든 자금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은행들은 선진금융기법과 막대한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자금조달 시기에 관계없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수립이 필요

2.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해결과제

가. 혁신기업이 노력해야 할 일

□ 사업성이 높고 시장 친화적인 아이템 개발

- 기업이 Funding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부담위험을 초과하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 개발이 필요
- 초과이익은 기업공개나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아이템 개발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으나, 상당수 기업들은 경영자가 과거에 습득한 아이템을 활용하는 수준
- ➔ 기업은 자사의 아이템을 '세계최고'라고 과대평가하는 자세를 버리고, 국내외 시장수요에 맞는 아이템 개발에 노력을 집중
- ➔ 정부는 기업들이 시장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존의 기술개발 일변도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아이템 개발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가 필요
-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아이템 개발에 자금의 30%를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자금을 기술개발에 지원

□ 경영권 침해 우려보다 기업성장 지향적인 관점에서 자금조달

- 융자형태보다 비용부담이 적은 투자형태의 자금공급은 조달기업의 지분분산을 수반시킴
- 가족중심으로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은 높은 애착심으로 인해 지분분산에 따른 경영권 침해를 우려하여 투자형태의 자금조달을 기피

→ 창업자는 지분을 고수보다 기업성장이 우선이라는 열린 경영으로 본인의 지분을 축소시키며 외부자금을 조달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

→ 정부는 민간벤처캐피탈보다 경영권 침해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은행권의 공급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수립이 중요

* 은행권을 통한 자금공급은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이미지 제고를 통한 신인도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는 효과가 발생

□ 기업정보의 투명성 강화

○ 자금공급자와 조달기업을 연결하는 기업정보의 투명성 강화는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선결과제

— 혁신기업은 기술개발의 불확실성과 비용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무형자산을 보유하게 되어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정보비대칭이 발생

○ 금융거래에서 정보비대칭은 역선택 문제를 발생시켜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

— 자금공급자는 유망기업 선별이 곤란하여 사업성이 낮은 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희소자원을 낭비

○ 자금공급자는 자원손실에 대비하여 기업에게 추가적인 수익률이나 이자율을 요구하게 되므로 결국, 정보비대칭에 따른 손실비용은 기업이 부담

— 벤처사례가 보여주듯이 기업정보의 불투명성은 개별기업의 쇠망에 머물지 않고 산업전체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막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킴

→ 기업은 '나만 살면 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금융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기업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집중

→ 기업정보의 투명성 제고는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금공급자는 기업의 노력에 상응하는 우대조치가 필요

나.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 기술평가 인프라 확충

- 일반기업에 비해 혁신기업은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아서 신용도나 담보능력의 취약으로 인해 자금조달에서 어려움을 겪음
 - 무형자산은 객관적인 가치측정의 곤란과 수익창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와 담보제공에서 가치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음
- 혁신기업이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기술가치(무형자산)에 대한 신뢰성 높은 측정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 기술가치의 객관적인 측정은 신용도와 담보능력을 높이고 기술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기업들의 자금조달 경로를 다변화시킴
- ➔ 기술신용보증기금,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거래소 등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능력을 제고시키는 정책수립이 필요

□ 정책자금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 투자자금 회수의 불확실성과 신용위험으로 인해 민간금융기관의 창업초기(early stage)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공급은 실현가능성이 낮음
 - 90년대 후반 벤처버블이 붕괴되면서 민간금융기관의 초기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 초기기업은 혁신기업의 성장기반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실패 부분의 보정역할을 강화시키는 정책수립이 필요
 - 모태펀드를 설립하여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형태의 자금공급을 유도하고 있지만, 운영자금의 17.4%만을 초기기업 투자펀드에 투자하는 실정

- 중진공을 통한 직접공급은 양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운영자금의 부실화와 조달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 ➔ 모태펀드 성과평가지 초기기업 투자펀드 편입비율의 가중치를 높여 초기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
- ➔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직접지원은 지양하고, 보증확대를 통해서 민간금융기관의 투·융자형태 자금이 조화롭게 공급되도록 유도

□ 개별기업의 성장단계별 연계성 있는 자금지원 강화

- 개별기업의 금융수요에 대응되는 맞춤형 자금지원을 위해 성장단계(창업 ⇒ 성장 ⇒ 구조조정)별 자금공급 정책을 추진
- 정부의 지원제도는 창업기업을 증가시키고 기업들의 기술력을 높이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개별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자금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부족
 - 혁신기업은 일정한 영업주기(아이템 기획,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개발제품 사업화)를 반복하면서 성장하지만, 지원자금은 기술개발에 집중되어 상당수 기업체는 사업화 단계에서 실패
- 기업들이 영업주기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통해서 자생력을 갖도록 개별기업의 단계별 균형 있는 자금지원이 필요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특정기업의 아이템이 시장성이 있다고 평가하면 기술개발 및 제품사업화 자금을 시리즈 형태로 제공
- ➔ 향후 지원정책은 개별기업 단위로 아이템개발에서 사업화 단계까지 연계성 있는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